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업무현황

2026. 8. 12.



후

편

마

조

목 차

I. 일반 현황	1
II. 업무 추진실적	10
III.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13
IV. 주요 정책 추진계획	15
1. 대도약과 ‘초성장’ 실현	16
2. 지방주도 성장 + 경제영토 확장	21

I

일반 현황

1 기능 및 조직 현황

산업통상부는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 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 (정부조직법 제41조)

1. 기구 및 조직

○ 본부 : 장관, 1차관, 1본부, 1차관보·7실, 2국·20관, 75과 7팀

- * 기획·직속 :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 3관 9과 1팀
- * 산업 : 산업정책실 4관 15과 1팀, 산업성장실 3관 10과 1팀
- * 산업·자원안보 : 산업자원안보실 3관 11과 2팀
- * 통상 : 통상정책국 1관 7과 1팀, 통상협력국 4과, 통상교섭실 3관 11과 1팀
- * 무역·투자 : 무역투자실 3관 8과

○ 소속기관 : 1위원회, 8원, 5소, 1기획단

- * 무역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자유무역지역관리원(7개원), 광산안전사무소(4개소), 광업등록사무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 정원 및 현원

○ 정원 : 1,252명 (본부 825명 + 소속기관 427명*)

- * 무역위원회 59명, 국가기술표준원 220명, 자유무역관리원 73명, 광산안전사무소 34명, 광업등록사무소 25명, 경제자유구역기획단 16명

○ 현원 : 1,182명 (본부 818명 + 소속기관 364명)

【 직급별 정원 및 현원 (26.8월 기준) 】

구 분		직급별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기타
합계	정 원		1,252	3	39	27	78	98	385	495	127
	현 원		1,182	3	35	23	89	79	385	455	113
본부	정 원		825	3	31	24	51	87	300	302	27
	현 원		818	3	27	19	67	74	310	293	25
소속 기관	정 원		427	0	8	3	27	11	85	193	100
	현 원		364		8	4	22	5	75	162	88

3. 실별 주요 업무

1 산업, 자원안보, 표준 (차관 소속)

☐ 산업정책실

- (산업정책관) 주력산업 고도화, 新산업 육성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혁신인력 양성, 산업 GX, 산업-에너지 협력, 사업재편 지원
- (지역경제정책관)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메가특구, 지방투자 촉진, 산업단지 고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제조산업정책관) 조선·모빌리티·방산 등 주력·신산업 육성
-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유통 상생발전 및 내수 활성화

☐ 산업성장실

-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 R&D 및 사업화, 산업 규제 혁신 지원
- (산업인공지능정책관) 기계·로봇·바이오 등 제조업과 AI 간 융합을 통한 M.AX(제조AX) 확산
-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이차전지 등 공급망 핵심·첨단산업 육성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제도 운영 및 개발 지원

☐ 산업자원안보실

- (자원산업정책관) 석유·가스·광물 등 안정적 수급관리 및 자원 안보 위기대응 역량 강화,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강화
- (산업공급망정책관)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수급 안정화
- (무역안보정책관) 무역기술안보 대응 및 국제공조, 수출통제제도 운영

☐ 국가기술표준원

- 탄소중립·디지털 등 첨단기술·신시장 국제표준 선점

☐ 무역위원회

- 덤핑·보조금,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판정 및 대응

□ 통상차관보

- (통상정책국) 미·EU·대양주와 산업·통상·자원 파트너십 강화, 대미 통상 현안 적극 대응을 통한 성과 및 경제 협력 제고
- (통상협력국) 동북아·동남아·중앙아·아중동 등 주요국과 산업·자원 분야 협력 강화 및 투자·기술개발 등 상호 교류 활성화
- (신통상전략지원관) 공급망·디지털·기후경제 신통상 규범 관련 양·다자 협상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통상교섭실

- (통상협정정책관) 전략적 통상협정 네트워크 구축 및 이행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산업의 경쟁력 확보
- (통상협정교섭관) 상품·서비스 등 시장개방 협상 및 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의 통상규범 정립을 통한 국익 확보
- (다자통상법무관) WTO 기능 회복을 통한 다자무역질서 복원 및 해외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및 WTO/FTA 등 통상분쟁 대응

□ 무역투자실

- (무역정책관) 물류애로 해소 등 수출 리스크 관리, 수출 총력지원 (무역금융·판로개척 등), 디지털·서비스 무역 등 미래 무역기반 조성
- (투자정책관) 외국인투자 유치 및 유턴(국내복귀) 촉진을 통한 글로벌 생산기지로 도약, 해외투자의 전략적 진출 지원 강화
- (원전전략기획관)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및 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합 분야 수출 관련 국제협력 강화



□ '26년 회계·기금별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 편성 현황

○ '26년도 본예산은 9조 4,342억원으로,

'25년도 본예산(7조 9,430억원*) 대비 1조 4,912억원(18.8%) 증가

* 국회 확정예산(11조 4,336억원)에서 조직개편('25.10월)에 따라 이관된 예산 제외

< '26년 회계·기금별 세출 및 지출 편성(단위: 억원) >

구 분	'25년		'26년		
	본예산(A)	최종	본예산(B)	증감액(B-A)	증감률
합 계	79,430	89,581	94,342	14,912	18.8%
◇ 예 산	78,010	88,160	93,142	15,132	19.4%
일반회계	38,620	45,605	51,351	12,731	33.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9,492	10,975	8,139	△1,353	△14.3%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18,228	18,228	19,549	1,321	7.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613	13,295	14,038	2,425	20.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57	57	65	8	14.6%
◇ 기 금	1,421	1,421	1,201	△220	△15.5%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1,421	1,421	1,201	△220	△15.5%

* 무역보험기금은 금융성 기금으로 상기표에서 제외

□ '26년 비R&D/R&D 편성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5년(A)	'26년(B)	'26년	
			증감액(B-A)	증감률(%)
비R&D	35,223	42,187	6,964	19.8%
R&D	44,207	52,155	7,948	18.0%

◆ 중동 전쟁 위기 극복 등을 위해,

'26년 추경 14개 사업 총 1조980억원 반영(본예산 대비 11.6% 수준)

* 산업통상부 유관 목적예비비(최고가격제 4.2조원, 나프타 0.5조원)

(단위: 억원)

구분	세부사업명	'26년 본예산	추경 확정안
❶ 피해기업·산업 지원		6,177	1,459
1	수출지원기반활용	1,811	330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414	59
3	무역보험기금출연	705	1,000
4	지역산업위기대응	246.7	70
❷ 에너지·신산업 전환(제조 AX 대전환)		4,666	830
5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	480
6	산업단지환경조성	4,099	145
7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	567.4	200
8	K-로봇 피지컬AI 생태계 조성	-	5
❸ 공급망 안정화		2,881	8,691
9	소재부품장비공급망안정종합지원 (나프타 보조, 요소보조)	1,350	6,783
10	석유비축사업출자 (비축유 구입, 신규탱크용역)	553	1,584
11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163	223
12	석유유통구조개선	7.6	19.8
13	핵심광물재자원화산업육성지원	37.8	20.8
14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769	60
합 계		13,724	10,980

□ 소관 법률 : 총 85개 (시행예정 법률 포함)

분 야	주요법률	
산 업	38	■ 산업발전법,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중견기업법, 반도체법(시행예정), 사용후배터리법(시행예정) 등
표준·인증	7	■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산업자원안보	28	■ 국가자원안보특별법, 가스사업법, 석유사업법, 광업법, 소부장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철강법, 석유화학법 등
무역·통상	12	■ 대외무역법, 외국인투자촉진법, 통상조약법, 통상변화 대응법 등

□ 22대 국회 법안심사 현황 ('26.7.31일 기준)

- (계류현황) 국회제출 총 448건 법률안 중 335건 계류 중
- (의결현황) 50건 본회의 의결

【 22대 국회 법안심사 현황 】

구분	제출·발의	계류(미상정포함)			처리		
		산중위	법사위	본회의	철회	대안폐기	의결
정부	13	4	-	-	-	1	8
의원	435	325	-	6*	3	59	42
합계	448	329	-	6	3	60	50
		계 : 335건			계 : 113건		

* 반도체법(김태년 의원안), 지역산업위기대응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계량법, 산업표준화법, 주얼리법

4

소관 공공기관 현황 (총 20개 기관)

□ 공기업 5개, 준정부기관 7개, 기타공공기관 8개

구분	기관 유형	세부분류기준	기 관 명
공 기 업 (5)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인 기관		
	시장형 (3)	자산 2조원이상,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85% 이상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
	준시장형 (2)	시장형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준 정 부 기 관 (7)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 미만인 기관		
	위탁 집행형 (6)	정부 정책 사업 위탁·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기금 관리형 (1)	기금 관리 위탁	한국무역보험공사
기타 공공 기관 (8)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		
	기타공공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대한석탄공사, 무역안보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II

업무 추진실적

① 국민생활·산업생산 차질없이 중동전쟁 위기 극복

□ 원유·나프타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통한 민생 충격 최소화

- 전략경제협력특사, 대체물량 차액지원 등 원유·나프타 물량확보 총력
* 7~8월 원유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 7월 나프타도 100% 수준 확보
- 비축유 SWAP·수출제한·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 등 수급균형 유지
-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시행(3.13.~), 시장교란 불법행위·가짜뉴스 엄단

□ 보건의료·핵심산업·민생 등 석유화학 후방산업 공급망 안정화

- 국민생활 필수품목 우선공급 지원, 매점매석 금지 조치
- 석화제품 공급망 TF(산업부 40여명) 및 50여개 품목별 담당자 지정을 통해 의료용품·핵심산업·농업용 제품 등 차질없이 공급

☞ 추후 위기발생에 대비, 다변화 등 근본적 자원안보 확립 필요

② 적극적 통상대응으로 수출 1조불 및 세계 5강 도약 기반 마련

□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수출 역대 최대 및 외국인투자 증가*

* 【수출】^(25.上)3,347억불→^(26.上)4,963억불(+48.3%), 【외투】^(25.上)131억불→^(26.上)142.8억불(+9.1%)

- 반도체^{+163%}외 뷰티^{+27%}, 패션^{+13%}, 푸드^{+9%} 등 소비재 수출도 약진

□ EU 철강 협상에서 다른 국가 대비 유리한 쿼터 확보*(207.3만~380.9만톤)

* 쿼터 감소폭: 전체 쿼터 △46% 韓 △19.7% 湄 △28.4% 인도 △30.2% 영 △66.6% 스위스 △67.5% 등

□ 전략적 對美 투자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투자공사 출범

- ‘韓-美 조선협력센터’(‘26.7) 개소, 對美 프로젝트(MASGA, 원전 등) 협의

☞ 글로벌 불확실성 상시화 → 중견국 연대, 전략적 경험 등 新산업통상 책략 필요

③ 지방주도 성장, 앵커기업 중심 대규모 민간프로젝트로 전환

- 파격적 규제특례·정책지원을 담은 「메가특구법」 구체화(연내 제정 목표)
- 3대 메가프로젝트 등 1,609조원의 앵커기업 지방투자계획 발표(~'30)

권역	투자분야(발표월)	주요 투자기업 및 금액
새만금	로봇·수소, AI시티(2월)	현대차(8.9조)
호남권	반도체 성장거점(6월)	삼성(425조) SK(470조) 앰코(1조)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7월)	삼성(140조) SK하이닉스(100조) 셀트리온(2조) AI DC(150조)
영남권	피지컬AI·우주 거점(7월)	삼성(60조) SK(140조) 한화(55조) 현대차(42조) LG(9.4조) 두산(5.1조)

☞ 산업-지역정책 연계를 통해 앵커기업 지역투자 집중 지원 필요

④ AI 산업혁신 및 주력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가시화

- M.AX(제조 AI 대전환) 가속화, 한국형 AI 산업혁명의 기반 마련
 - 대표 업종 중심, 전국 170개 사업장에 AI 팩토리* 확산
 - * 생산성 향상(30%↑), 불량률 감소(15%↓), 비용절감(20%↓) 등 달성 기대
 - ↳ 예: 반도체 품질검사시간 90% 감소, 이차전지 품질예측 정확도 87% 향상 등
 - 10개 제조현장 로봇 실증 및 분야별 M.AX 선도사업* 진행
 - * (로봇) 핵심부품, (자율선박) 자율운항기술,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등 개발
- 석유화학(4월)·철강(6월) 특별법 시행, 선제적 사업재편 승인*
 - * 석화 대산1호(HD-롯데, 2월), 여수1호(YNCC-롯데, 7월)

☞ 반도체 중심 K-자형 성장, 제조업 고용 악화 등에 대응 필요

⑤ 고질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및 관행 개선

- 한전-한수원 역량통합, 정부 교섭 기능강화 등 원전수출체계 효율화
 - * '원전수출체계 효율화방안'을 발표하고, UAE 정산분쟁 관할(영국→한국) 변경(5월)
- '가짜일 줄이기'로 비효율적 업무관행 개선, 실질성과 도출역량 확보
 - * ▲대기성 야근, 불필요한 출장 감소 등 직원만족도 ↑, ▲지속적 조직혁신 기반 마련

III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비전

초(超)성장 + 신(新)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

목표

- ▶ 3대 메가프로젝트와 M.AX를 新성장동력으로 육성
- ▶ 권역별 성장엔진으로 지역주도 성장 본격화
- ▶ 글로벌 산업·경제 안보 협력을 주도하는 리더십 확보

추진 전략



IV

주요 정책 추진계획

1. 대도약과 ‘초[超]성장’ 실현 [4대 성장축]

- ① 3대 메가프로젝트+ α 이행 속도전
- ② M.AX와 산업혁신으로 성장 가속화
- ③ 산업·자원 안보체계 혁신으로 성장
안전망 강화
- ④ 함께 성장하는 산업생태계 조성

1 3대 메가프로젝트+ α 이행 속도전

1,600조원 3대 메가프로젝트

- 반도체, 피지컬AI(AI로봇),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 투자의 신속 이행을 위해 국가 총력전 전개
 - 특히, 투자가 시급한 반도체는 매달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 개최, 산업부 內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 신설 등을 통해 밀착 지원

< 3대 메가프로젝트 주요내용 >

구분	분야				금액 (조원)
	반도체 「클러스터 전국화」	AI 로봇 및 피지컬AI 「AI 로봇 세계 3강 도약」	AI 데이터센터 「소부장 등 생태계 조성」	기타	
호남권 (6.30일)	▶ 제2의 생산 거점: 대규모 Fab	▶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조성	▶ AI 데이터센터 : 1GW+ α	▶ 차세대 스마트가전, 에너지	896
충청권 (7.2일)	▶ 패키징 거점: 패키징 Fab	-	▶ AI 데이터센터 : 2GW+ α	▶ 디스플레이, 바이오, 배터리 생태계 강화	392
영남권 (7.3일)	▶ 차세대 반도체 및 소부장 핵심거점	▶ 휴머노이드 양산	▶ AI 데이터센터 : 2GW+ α	▶ 제조·국방 등 AX	312

- 기업의 투자 의지에 발맞춰, 대규모 투자의 걸림돌은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도전적으로 해소

< 예: 진행중인 투자 관련 애로 해소 과제 >

구분	과제 및 대응방향
입지	▶ 국가산단 지정 → 인허가, 보상, 부지확보 등 관련 절차 병렬처리
전력·용수	▶ 전력·용수 공급 →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 등에 반영
교통	▶ 광역교통망 확대 → 고속도로·KTX 확충(예 : 광주~영암 아우토반 등)
클러스터	▶ 클러스터 지정 → 국가산단 지정과 동시 진행하여 인프라 지원 강화
인력	▶ 지역인재 유치 → 남부권 반도체 연합공대 사업 추진, 정주여건 개선

- 그 밖에, 3대 메가프로젝트 소부장 국산화*, 반도체·로봇 인력 11만명 양성으로 생태계 혁신 및 경제 효과(청년 일자리, 지역 성장 등) 극대화

*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3대 취약부품(액츄에이터, 센서 등), AI DC 핵심 소부장 개발 등

2 M.AX와 산업혁신으로 성장 가속화

M.AX 제조현장에 대대적 AX 접목

- 용접, 조립 등 숙련인력의 제조공정 암묵지를 데이터화('26~)
 -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활용하는 '제조 Data Library'도 구축('27~)
- 제조공정 100개를 AI팩토리로 전환('26)하고, AI·로봇이 자율 판단·운영하는 '풀스택 AI팩토리' 개발('27~'31)
- 'M.AX법'('산업디지털전환법」 개정)으로 제조AX 확산체계 구축('26.下)
 - 데이터 수집·관리 등 체계 확립 및 인력·금융 등 기업지원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력으로 글로벌 산업혁신 주도

- 바이오: AI + 바이오 융합 기반* 조성으로 혁신제품 개발 가속화
 - * 공공 파운드리, 공공 CDMO에 AI 기술 접목으로 국내기업의 후보물질 발굴, 실증 지원
- 배터리: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전주기 국내 생산체계* 고도화
 - * 마더팩토리 구축(충부권) + 핵심소재 개발(동남·대경권) + 핵심원료 정제·가공(서남권) 지원
- 디스플레이: 초고해상도·초저전력 OLED 등 비교불가 기술력* 선점
 - * 첨단디스플레이연구원 구축('30년 개소), 차세대무기발광다이오드(iLED) 실증센터('26.下 착공)

주력산업 AI, 로봇 접목으로 제조 주도권 확보

- 자동차: 미래차 시대에 발맞춰, 자동차 부품 생태계 대전환 촉진
 - * 부품기업 사업전환, 미래차 3대 핵심기술(자율주행AI, 차량용 반도체, SDV 등) 개발 등 지원
- 조선: 미래 운항·제조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첨단 선박 제조역량 확보
 - * 선원 및 제조인력 고령화감소 → 자율운항·친환경선박 R&D, 자율운영조선소 구축 등 지원
- 방산: 무기체계 AI 적용, 동남권 첨단방산 허브* 중심 생산기반 확대
 - *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 함정 MRO 클러스터(부울경·전남) 지정

③ 산업·자원 안보체계 혁신으로 성장 안전망 강화

□ 원유·나프타: 도입 다변화 및 비축 강화로 안전성 제고

○ 도입 다변화 인센티브 강화, 장기계약 등 도입방식 다각화

- 다양한 원유(초중질유·경질유) 처리를 위해 생산설비 개선*

* R&D 초중질·경질유 정제·블렌딩 기술 확보, 설비개선 정제설비 개선으로 초중질유 투입비중 확대

○ 비축유 추가 저장을 위한 원유 비축시설 증설 및 국제공동비축* 확대

* 비축시설 증설과 연계, 사우디·UAE 등과 국제공동비축 협력 확대

- 비축유종(콘덴세이트, 나프타 등) 다양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성 제고

□ 광물: 국내개발, 재활용, 국제 협력 등을 통한 전방위 확보

○ 공급망 기여도가 높은 핵심광물 프로젝트 중심으로 정부지원 강화*

* 예: ▲반도체용 광물 정제련시설 정책금융, ▲희토류 개발지원 ODA·EDCF 협력

○ ‘수출승인 강화 + 수입규제 완화’로 원료 확보, 산업분류체계 개선 (폐기물처리업 → 제조업), R&D*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반 강화

* 희토류 재자원화·대체·저감(‘27년~), AI 재자원화 자율해체 통합플랫폼 구축(‘27년~)

○ 광업공단 기능을 핵심광물 확보·비축 등 자원안보 관점에서 전면 개편

○ 책임감 있는 사업자 중심 국내 핵심광물 개발을 위해 「광업법」 개정

□ 경제안보: 공급망 핵심기술 경쟁력 제고 및 기술보호 강화

○ 4대 도전기술* 중점 지원, 수요-공급기업 협력으로 차세대 기술 확보

* ①시장선점형(첨단), ②시장전환형(고부가), ③규제대응형(GX), ④공급망확보형(핵심광물)

○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산기법·외축법)로 기술유출 차단, 손해배상 실질화

○ 우리기업의 수출통제 애로해소를 위한 美·中·EU 등 주요국 협력강화

* 韓-日(‘26.7월), 韓-中(‘26.7월), 韓-베(‘26.3Q), 韓-美(‘26.下) 등 정부간 수출통제대화 개최

□ 추진체계: 산업자원안보기금·산업안보원(現 무역안보관리원) 신설

4 함께 성장하는 산업생태계 조성

□ 앵커기업-협력업체 동반성장: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

- 앵커기업^{2.8조원}·정부^{1.8조원}가 함께 미래 성장동력*에 5조원 투자('26~'30)
* 예: 로봇 클러스터, 아미노산 생산공장, AI 조선소, OLED 공정혁신 등
-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10조원)를 조성하여 협력업체에 투자

□ 중소→중견→대기업으로 도약하는 성장사다리 강화

- 초기 중견(전체의 85%) 맞춤형 성장촉진 지원 및 기업친화형 제도 개선
* 초보 중견기업 성장지원 시범사업(컨설팅·이행비용 지원, '27~), 대·중소 이분법 제도 정비 등
- 독자기술 보유 앵커형 중견기업 확충(중견기업 혁신성장 대책 마련, '26.8.)

□ 미래 유망·전략 품목 육성을 통한 수출 기업 다변화

- K-소비재 수출 3대 애로(유통·마케팅·인증) 집중 해결
* (유통) 제품-플랫폼 동반진출, (마케팅) 현지 맞춤형 판로개척, (인증) 해외인증서 국내 발급
- 방산, 원전, 전력 등 전략 수출 품목에 대규모 금융지원(127조원, ~'30)
- 현장수요 맞춤형 지원을 위한 「KOTRA법」, 「무역보험법」 개정
* (KOTRA) 수출지원사업 다각화기업 연속지원 기반 마련, (무보)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확대

□ 제조업 내수기반 강화 및 고부가 전환 사업재편 가속화

- 석화: 과잉설비 축소(Δ 18~25%), 효율성 향상, 고부가·친환경 전환과 함께, 설비감축 후 공급망 안정*, 지역·고용 지원 등 생태계 고도화
* 나프타 대체원료(에탄) 도입, 핵심품목(의료용 소재 등) 관리방안 마련, 친환경 원료 전환 등
- 철강: 조선, 재생에너지 등 국내 전후방 기업 간 연계 강화

□ 청년이 같이 성장하는 젊은 산업단지 조성

- 생활·정주여건 개선 등 매력있는 지역산단을 만들기 위해 문화선도 산단을 신규 조성*하고, 교육·교통 등 청년 성장 바우처도 신설 검토
* ('26) 3개소 → ('27) 4개소 / 랜드마크 구축, 노후공장 리뉴얼, 청년 디자인리빙랩 운영

2. 지방주도 성장 + 경제영토 확장 [2대 공간축]

- ① 권역별 성장엔진 중심 지방주도 성장 본격화**
- ② 글로벌 산업 · 안보 협력을 주도하는
‘경제책략’구현**

1 권역별 성장엔진 중심 지방주도 성장 본격화

□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 메가프로젝트 이행계획, 지역별 여건, 성장 잠재력, 국가 산업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역별로 3~4개 산업 선정 추진

<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고려사항 >

① 메가프로젝트	② 지방의 산업 여건
▶ 권역별 메가프로젝트 및 기업 지방투자 ▶ 지방정부의 투자 지원 계획	▶ 산업 집적 수준과 인프라 ▶ 대학·연구소 등 산학연 생태계
③ 미래 성장잠재력	④ 국가 산업전략성
▶ 지역 내 고용 및 중소기업 파급효과 ▶ 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 효과	▶ 범정부 정책 정합성 및 연계성 ▶ 정책 실현 가능성 및 권역 차별성

- 신임 지방정부(민선9기)와의 성장엔진 소통·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8월중 중앙-지방정부 협력회의를 통해 최종안 발표 예정

□ 권역별 성장엔진 투자는 '메가특구'와 '7대 패키지'로 전폭 지원

-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메가특구법」 제정, 제1호 메가특구·짜르* 지정

* 최고운영책임자: 대통령이 임명, 메가프로젝트 관련 규제특례·인허가 통합조정

- 재정·금융·세제·제도·인재·기술·인프라 등 범부처 7대 패키지 지원

분야	주요 지원 내용	분야	주요 지원 내용
재정	특별보조금 신설, 투자보조금 우대 등	금융	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투자우대
세제	기업·근로자 대상 지방 우대세제 지원	제도	인허가 신속처리,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
인재	성장엔진 브랜드단과대·융합연구원 신설	기술	지역자율형 R&D, AX사업 우선지원
인프라	문화·보육·주택 등 정주여건 개선		

□ 지역 산업 인프라의 AI 전환(AX), 그린 전환(GX) 지원

- 권역별 거점 산단 7개를 'M.AX 클러스터*'로 조성(~'30)

* 주요 지원내용: 5G특화망·엣지 AIDC 인프라 보급, 산학융합인력양성(M.AX 아카데미)

-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와 파격적 세제,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신속 추진('RE100 산단 특별법' 제정 목표)

2 글로벌 산업·안보 협력을 주도하는 '경제책략' 구현

□ 정상외교 성과를 토대로, 상대국 성장의 필수 파트너로 자리매김

국가	정상외교 성과 확대 방안
미국	對美 전략투자 MOU 이행을 통해 조선, 원자력 등 양국간 전략산업 협력 강화
EU	에너지, 자동차, 방산 등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기반 협력 본격화
중국	서비스 신시장 개척(FTA후속협상 타결), 지방협력 강화(새만금 투자유치 등)
일본	원유·LNG SWAP 등 공급망·핵심광물 안보협력강화
인도	한국기업 전용산단 구축, 전담조직 신설
베트남	원전 개발협력 가속화, 핵심광물 공급망·산업기술인력 양성 협력 확대
몽골	한-몽 CEPA 서명 준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유통·소비재 진출 지원

□ 韓-美 관세합의에 따른 전략적 對美 투자를 기반으로 상호이익 실현

- 철저한 전략성·상업성 검토를 통해 국익부합 프로젝트 선별
- 조선협력센터 개소('26.7), 우리기업 美 시장선점 지원
- 무역법 301조 등 관세조치에도 관세합의 이익균형 유지를 위해 최선

□ 중동전쟁 이후, 새로운 산업협력 기회 창출

- 중동 탈석유·산업다변화 기조에 대응, 경제협력 프로젝트* 완수 지원 및 사우디·카타르·UAE 등 현지기업과 M.AX 협력 확대
* 예: 사우디 현대차 완성차 공장('27년 양산), HD현대 합작 IMI 조선소('27년 가동)
- 전쟁 후 석유·가스 생산증대 수요 등 고부가 플랜트 수주지원 강화
* 고위급 면담 계기 우리 기업 수주 지원, 주요 발주처 대상 先금융 지원(무보 30억불) 등
- 체코핵심일정(인허가 등) 이행, 베원전협력 논의개시 등 원전수출 가속화
- 국가별 맞춤형 산업협력체계 가동 및 패키지 제공으로 방산수주 확대

□ 시장다변화·공급망 기반 강화를 위해 CPTPP 가입 추진 검토

- 멕·日·아세안* 등 시장접근 개선 및 K-컨텐츠·소비재 수출 가속화
* 멕시코와 신규 FTA 체결 효과, 일본·아세안과는 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효과

□ 수출·해외진출에 기여하는 성장 협력모델 구축

- UAE·체코·베트남 등 협력 성공모델을 阿·중남미 등대륙별 거점으로 확산*
* 예: 제조센터 구축(우즈벡파라과이), 현지 인력양성(인나·이집트), 핵심광물센터 신설(카자흐·인나)
-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으로 해외 무역장벽·기업애로에 대응